

001 p.74 96번 문제 아래 - 아래 내용 추가 후 번호정리

096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가 바르게 된 것은? 18 채움 2차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 ① ㉠(O) ㉡(O) ㉢(O) ㉣(O)
- ② ㉠(×) ㉡(O) ㉢(O) ㉣(O)
- ③ ㉠(×) ㉡(O) ㉢(×) ㉣(O)
- ④ ㉠(O) ㉡(×) ㉢(O) ㉣(×)

해설

-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경무부 ×)**을 신설하고, **경무청(경무부 ×)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정답 ②

002 p.87 118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118 「경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5 채움3차, 18 채움2차 변형

-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해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정답 ①

003 p.95 131번 문제 해설 - 아래 내용으로 교체

해설

③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제10조 제3항).

정답 ③

004

p.105

147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147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및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것만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4 경간, 15 경간 변형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 (○)
- ㉢ (○)
- ㉣ (○)

정답 ②

005 p.114 158번 문제 아래 - 아래 내용 추가 후 번호정리

159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채움 2차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견책처분을 받은 기간 ×)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단서
- ㉢ (○) 「경찰공무원법」 제2항 제7호
-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사망한 날 ×)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제2항).
- ㉤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단서

정답 ③

006

p.116

161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161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 경간

- ㉠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대우공무원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거나 강등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대우공무원은 **총경과 경정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감 이하는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35조).
- ㉢ (×)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정답 ②

007 p.147 208번 문제 - '㉠' 지문 - 아래 내용으로 교체

-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08 p.179 257번 문제 - '가' 지문 - 아래 내용으로 교체

-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009 p.181 258번 문제 - '㉠' 지문 - 아래 내용으로 교체

-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010 p.408 240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240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채움1차, 17 경기북부여경

- ①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X)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정답 ③

011 p.408 241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241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승진

- ① 최초 위반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음주측정 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음주운전 2회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① 최초 위반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①

012 p.409 242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교체

242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18 경간

-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정답 ④

➡정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음주운전 처벌규정 -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강화

| | |
|---|--|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13 p.430 267번 문제 - ㉔지문 - 아래 내용으로 수정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014 p.430 268번 문제 - ‘라’지문, 해설 - 아래 내용으로 수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015 p.431 269번 문제 - ‘㉔’지문, 해설 - 아래 내용으로 수정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

016 p.431 270번 문제 - ‘㉔’지문, 해설 - 아래 내용으로 수정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017 p.432 271번 문제 - ‘㉔’지문, 해설 - 아래 내용으로 수정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 ‘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018 p.552 453번 문제 아래 - 아래 내용 추가 후 번호 정리

449 「범죄인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채용차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 한다(아니할 수 있다 ×)**.

정답 ②

01

2019년 채용 1차(2019.4.27. 시행)

01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용 1차

- ①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 ② 공공질서란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 ③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 ④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용 1차

- 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 ②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적 거래(증여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03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용 1차

-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 ③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0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채움 1차

-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0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 ④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0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07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0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0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채움 1차

-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②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다.
- ③ 직위분류제의 경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1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19 채움 1차

- ① 내부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 ② 외부통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 ③ 사전통제: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 ④ 사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1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서,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②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 ③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가 있다.
- ④ ‘유지관리’란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가 있다.

13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19 채움 1차

- ㉠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 ㉥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4 현재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채움 1차

- 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 ④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1일에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 ②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 ④ 재난피해조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 1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단,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전제함)

19 채움 1차 변형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된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채움 1차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19 채움 1차

- ㉠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규정이 상충되면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0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채움 1차

- 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②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02

2019년 채용 1차(2019.4.27. 시행) - 정답 및 해설

01

- ①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즉시강제 ×) 등)과 경찰상 즉시강제(직접강제 ×)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강제(직접강제 ×)와 구별된다.

정답 ①

02

- ④ 사적 거래(증여 제외(포함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정답 ④

➡ 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03

- ③ 원칙적으로 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대리관청 ×)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③

04

- ②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제3호
- ①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경찰청장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③ (×)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3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
-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위임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정답 ②

- 05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1/3 ×)을 감한다. 정답 ③
- 06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는 것은 옳은 지문이나, '최소침해원칙'은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상당성 ×)의 원칙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②
- 07 ③ 경찰하명권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③
- 08 ① (×)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즉, 행정지도는 문서, 구두 모두 가능하다(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 정답 ①
- 09 ②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① (×) 경찰관은 상대방의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③ (×)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을 의미하며 흉장은 포함되지 않는다(흉장도 포함된다 ×).
 ④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답 ②
- 10 ①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정답 ①
- 11 ① (×) 경찰위원회 : 외부통제
 ③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 사후통제
 ④ (×)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 사전통제 정답 ②
- 12 ②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영역성의 강화 ×)'에 해당한다.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펜스의 설치 등이 영역성의 강화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②

13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대마 ×)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마는 마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찐땀(무미 ×)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 ㉢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에 해당한다.
- ㉣ (×)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술, (코데인 ×),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코데인’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정리 마약류의 분류

| | | |
|-------------|----------------|--|
| 마약 |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등 |
| | 한외마약 | ①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약품 ② 코데날, 코데잘, 코데술, 유코데, 세코날 등 |
| |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등 |
| |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
| 대마 |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 |
| 향정신성 의약품 | 각성제 |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
| | 환각제 |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메스카린) 등 |
| | 억제제 |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디아아핀제제 |

14

- ㉠ (×)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지므로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인정된다.

정답 ④

15

- ㉠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대응 단계 ×)에서의 활동이다.
- ㉡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대비 단계(예방 단계 ×)에서의 활동이다.
- ㉢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예방 단계(대비 단계 ×)에서의 활동이다.

정답 ④

➡ 정리 재난관리 체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 |
|------------------------------------|--|
| 예방(또는 완화) 단계 (Mitigation Phase) | ①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②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
| 대비단계 (Preparedness Phase) | ①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 ② 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
| 대응단계 (Response Phase) | 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②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

| | |
|--------------------------|---|
| 복구단계 (Recovery Phase) | ①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②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 16 | ㉠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3년 ×)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div>정답 ③</div> |
| 17 | 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5년(3년 ×)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div>정답 ①</div> |
| 18 | ①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취득한 사람 ×)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제외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 ×)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div>정답 ④</div> |
| 19 |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니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연기할 수 없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 <div>정답 ④</div> |
| 20 | ③ (×)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매년 ×)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④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2항 <div>정답 ③</div> |